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8/ 9 통권 163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중간지

2023 세법개정안 및
문답자료

202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영상공토텐츠 투자세액공제 확대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예외
- 기술혁신형 M&A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맥주 · 탁주 주세를 물가연동제 개선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확대
- 노후 여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보수 지급 방법별 세금절차 비교〉

개념비교	근로소득 퇴직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정의범위	종속적 근로계약	근로계약 + 일별계산	독립적 자유계약	일시·우발소득
직장·거래	주로 한 직장	일별 다른 일터 변동	여러조직 계약	권리나 양도대가
계산방법	지급자 연말정산	지급자 일별정산	수취자 종합소득 신고	지급자 원천징수 + 수취자 신고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하루일당 - 15만원) × 6% × 45% × 1.1	총 지급액 × 3.3%	열거소득은 지급 액 × 40% × 22% = 8.8% 원천징수
추가부담금	4대보험 (직장가입)	4대보험 (직장부담)	지역보험 부과	지역보험 부과
중업원 사업소세	근로소득금액 × 0.5%	좌동	해당없음	해당없음
간이지급명세	매월 해당	매월 해당	매월 해당	인적용역은 매월
최종지급명세	연말정산 1년 단위(3월 10일)	매 다음달 말일	1년 합산 (3월 10일)	1년 합산 (3월 10일)
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공제 + 특별지출공제 (지급자의 연말 정산)	실효세율은 총 지급액의 1% 내 외	총 수금액 - 실제 필요경비	소득액의 40%만 과세
주적용사례	중견대기업 정규직장	건설현장 등	보험설계, 스포츠인 등 프리랜서들	권리이전· 양도대가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35호 / 주간 32호

2023. 8. 9.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1. 그간의 추진경과 2
2. 조세정책 여건 3

II.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5

III. 세법개정 상세 내용

6

1. 경제활력 제고 7
2. 민생경제 회복 13
3. 미래 대비 17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0

IV. 세수효과

28

V 세법개정 추진일정

28

1. 개정대상 법률: 총 15개 28
2. 추진일정 29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I.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29
2. 기업경쟁력 제고 33
3. 창업·벤처 활성화 39

II. 민생경제 회복

40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40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42

III. 선제적 미래 대비

44

1. 결혼·출산·양육 지원 44

◇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2023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 문답자료

- 기획재정부, 2023. 7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1 그간의 추진경과

□ 지난해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개편

- (투자촉진)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기업투자 촉진
 -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투자 자금 유입 및 경상수지 개선 등 기여*
 - * 금년 1~5월 배당수지 대폭 증가(+116.7억불, 전년비 127.6억불)
→ 에너지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34.4억불) 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
 -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로 세대 간 기술·자본이전 촉진
 - * 중견기업 대상확대(매출 4→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100억원), 사후관리기간 축소(7→5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 (민생안정)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식비·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 등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EITC 최대지급액 10% 확대 및 요건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20만원), 월세세액공제 확대(최대 12→17%) 등
- (부동산세제 정상화)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 금년 조기시행 과제는 상반기 중 수시 개정·조치 완료

- 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 '23년 상반기 중 법률 및 시행령 수시개정 완료

< '23년 상반기 중 세법개정 주요 내용 >

- 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5.1~8.31)
- ② 22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 ③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 ④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
- 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7.1~12.31)
- ⑥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세제부문) 제정

- 「내수활성화대책」('23.3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월)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과제 기발표

2 조세정책 여건

□ (경제 여건) 물가 둔화 및 경기 개선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 * 6월 소비자물가 2.7%(21개월만에 최저), 생활물가 2.3%(27개월만에 최저)
- 경기는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美 성장 둔화 및 中 경제회복 지연 우려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 * 글로벌 D램 매출(십억불, Gartner(6월)) : ('23.1/4) 9.6 (2/4e) 9.8 (3/4e) 10.9 (4/4e) 13.4

□ (구조적 여건) 인구위기·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문제 심화

-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가속화
 -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15~64세) : ('10) 34 ('15) 19 ('20)△15 ('25e)△32
-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응 강화 필요

□ (재정 여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복원 필요

- 금년 국세수입은 어려운 상황*이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시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3년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감소

** 성장률 전망(전년동기비, %) : ('23.上) 0.9 → ('23.下) 1.8 → ('24년) 2.4

○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중, 복지지출 증가 등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 확대

* 관리수지(조원) : ('17)△18.5 ('19)△54.4 ('20)△112.0 ('21)△90.6 ('22)△117.0

☞ 지난해에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인구·지역 위기 등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 중점 추진

참고 - 23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 대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 ① (개정 건의)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42개 단체에서 1,381건 세법개정 건의
- ② (비과세·감면 평가)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 도래)*·예비타당성평가(신설 예정)** 24건 진행
 -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 +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 : 23건
 -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특례 신규 도입시 예타 의무 : 1건
- ③ (대내 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 수시 개최
 - * 세법 개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 (참석자) 세제실장, 국장 5명, 조세정책과장, 담당과장 및 사무관 등
- ④ (대외 의견 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구 분	내 용
▸ 관계기관 간담회	▸ 금융단체,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 세제분야 전문가*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 소득·기업·재산·소비·국제조세·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회위원회	▸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정책방향 점검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II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❶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 투자 · 고용 지원
- ❷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 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❸ 인구 · 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 ·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 ❹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정책
목표

경제 활력 ·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추진 전략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수출 · 투자 · 내수 진작	세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고용 촉진 ✓ 기업경쟁력 제고 ✓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인구 · 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 세입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양육지원 ✓ 청년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지역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권익보호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과세형평 제고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업벤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2. 민생경제 회복

서민· 중산층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3. 미래 대비

결혼출산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 형성 노후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역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회피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과세형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1 경제활력 제고

◇ 기업투자·고용·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기본공제를 상향*
 - *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 (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

구 분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최대 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조특령·조특칙)

-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25~35%, (R&D) 30~50%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16~28%, (R&D) 20~40%
- ❶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3.7.1.~)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
-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23.8월 중 조특령·규칙 개정 예정)
- ❷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4.2월) 시 반영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조특령)

- ❶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 ❷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발표
-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도입
- *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소령)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
- * (프로판) 20→14원/kg, (부 탄) 275→176.4원/kg

□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26.12.31)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조특법·조특령)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대상확대) 외국인이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
 -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에서 발표
-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9%) 선택 허용(20년간)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 * 현재는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 ※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23.6.5.)에서 발표
 - * 외국인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 ①즉시환급, ②도심환급 및 ③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환급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5만원)하고,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증여재산가액(억원)	세 율 (%)	
	현 행	개정안
0초과 ~10이하	0(기본공제)	0(기본공제)
10초과 ~ 60이하	10	10
60초과 ~ 300이하	20	10
300초과 ~ 600이하	20	20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 신설
 - * (현 행)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개정안)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재까지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조법)

-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납입규칙은 `24.1.1. 시행하되 소득납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24.1.1.→'25.1.1. 시행)
- * ① 소득납입규칙(IIR):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24.1.1. 시행)
- ② 소득납입보완규칙(UTPR):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25.1.1. 시행)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을 요건 완화(5→2%)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조특령)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구 분	현 행	개정안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취득시기	1년 이내	2년 이내
과세방식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 조특령)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3)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법)

-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4.)에서 발표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 ①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 $\text{Max}(\text{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 \text{모펀드 투자금액의 } 60\%) \times 5\%$
 - ** $(\text{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 \text{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 \times 3\%$
 -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②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③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조특령)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에서 발표
 - * (현 행) $\text{Max}(\text{특허권 등 평가금액}, \{\text{양도가액} - (\text{순자산시가} \times 130\%)\})$
(개정안) $\text{Max}(\text{특허권 등 평가금액}, \{\text{양도가액} - (\text{순자산시가} \times 120\%)\})$
-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최대 1→2년내)

2 민생경제 회복

◇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 ('23.4.1.~12.31.)
 -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기본방향 발표
-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 (*('24.1.1.~12.31.)
 -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세법)

-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0% 범위 내 조정

-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pm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시행령) 조정
 - *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 * '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Delta 20\%$) 한시 도입
-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 ('25.1.1.~)
-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조특령)

-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현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①납부 지연가산세 면제, ②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7.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①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②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 우대
- ③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자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 감면(316→276원/kg)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3 미래 대비

- ◇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 분	현 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 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좌 동)
기타친족	1천만원	(좌 동)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기본방향 기발표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소득령, 법인령)

-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발표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①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 ②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조특법)

-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
-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❶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❷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 ❸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특법)

-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34.6.30.)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3년 100% + 2년 50%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 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3,000→5,000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국기령)

-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세무법인 등) 소속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제외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시 '증여세*' 및 '미달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
 - * 과세대상: 지분을 5% 초과 주식 보유분
-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 허용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
 -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주류면허법)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2배로 상향 조정
 - * 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99년말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 없음

< 주세포탈 금액 기준 조정 >

현 행		⇒	개정안	
탁주	50만원 이상		탁주	100만원 이상
맥주	1천만원 이상		맥주	2천만원 이상
증류주, 주정	500만원 이상		증류주, 주정	1천만원 이상
기타 발효주류 등	200만원 이상		기타 발효주류 등	400만원 이상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쓰기 (소득법·소득령)

-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 정비

■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규정 신설

* (현행) 각종 특례((예)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8가지 유형 및 총 25개항)가 요약규정 없이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해 곤란

■ 도표 및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문(長文) 규정은 단문(短文)을 사용하여 세부 요건별로 분리 기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 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

* (현 행) 금지금, 고금, 금·구리·철스크랩

(개정안)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등) 추가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

○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법)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 사항 · 포탈관세액 등 공개*
 - * (현행)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조세법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소득령)

-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 *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①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②'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시 재취득 제한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관세특례법)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는 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 지정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여행사업, 앰블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조특법·소득법·소득령)

-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제출인원 당 300원 공제(연 200만원 한도)
-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
 - *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소액(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법·법인령)

-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특령)

-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조법)

-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사항 정기 논의를 위한 체약국간 공동 협의기구

참고 -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71개 (일몰 64건 + 부분일몰* 7건) 항목 중 종료 6개, 재설계 7개, 적용기한 연장 58개

* 제도 중 일부 내용에 일몰 설정(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3년말 일몰)

□ (정비원칙)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 · 축소

□ (정비대상)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6건 일몰 종료 추진

*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 ('18) 7건, ('19) 4건, ('20) 9건, ('21) 9건 ('22) 9건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유가 안정세 등 정책목적 달성 및 일반주유소 휴·폐업 증가 상황 고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금사업자와 스크랩업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용계좌 개설 수, 거래금액 · 건수 증가 등 정책목표 달성
재 설 계 (7)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 리츠·펀드간 전환 가입 시 감면세액 추정 면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세액 추정사유 합리화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연 장 (58)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정부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등의 R&D투자 · 사업화 촉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업 연구개발 촉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우수 외국인근로자 유치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경감 및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
	•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 재투자 장려 및 벤처창업자의 노하우 전수 지원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및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장기간 소요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어촌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 지속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수행 지원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장·물류시설을 이전한 기업 지원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 위한 목돈 마련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 복지 향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지원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위기지역 경기회복 지원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서민금융 지원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 및 확대 촉진 유도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학생 등에 안전하고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복지증진 지원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지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안정 지원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을 통한 재활용 촉진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경차 보급 확대에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택시업계 유류비부담 완화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어민 지원
	•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소액창업 지원
	•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양도)	현물·선물가격 괴리 축소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구조조정 활동 지원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권익보호 지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명칭사용용역,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 지원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유지 필요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대한 과세특례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 유도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금 현물시장 활성화, 금 거래 양성화
	•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음식점 공제율)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IV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4,719억원

- (증가 요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
- (감소 요인)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4,719	△7,546	1,778	241	△269	1,077
소득세	△5,900	△7,415	879	636	-	-
법인세	1,690	119	1,572	△1	-	-
부가가치세	△437	77	△370	△144	-	-
기타	△72	△327	△303	△250	△269	1,077

V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5개

□ 내국세(13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세(2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추진일정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일부 발췌)**I 경제 활력 제고****1 투자·고용 촉진****(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 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 5%	+	10%	⇒ 15%
중견기업	7%	→ 10%		10%	
중소기업	10%	→ 15%		15%	

□ (개정 취지)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 ☐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

※ 【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

(미 캘리포니아) 총 제작비 75% 이상 국내 지출, (프랑스)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 (영국)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 (호주)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

- ☐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할 계획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투자재원 확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된 이유는?

-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영상콘텐츠 등)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여 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문화산업법」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① R&D 세액공제 개요

- ☐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1)	40~50%2)
중견기업	8~15%	40%	20~30%1) (코스닥 상장 25~40%)	30~40%2)
대기업	최대2%	25%	20~30%1)	

- 1)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2) 30%(중소기업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투자세액공제율(%)

구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10

* □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적용)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이동수단 (+ ⑦바이오 의약품 추가 예정)

2) 신성장·원천기술 : 13개 분야*, 262개 기술, 185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①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②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 ①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
- ②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세분류 상 동일업종)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 곤란*
 - * (예시)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전기장비 제조업)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
 -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내연차 부품 제조 → 전기차 부품 제조)을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

□ (개정 내용) 유턴기업 ①세액감면 기간 확대 및 ②업종요건 완화

- 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 * (현행) 5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7년 100% + 3년 50% 감면
 -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2년 감면)
- ②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② 기대효과

□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제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RE100 등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반 강화를 위해 '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 * RE100 선언 :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나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의 관세를 감면(50%)

② 감면 적용품목

□ 태양광에너지(1개), 풍력에너지(13개), 수소·연료전지(2개) 생산·이용 기자재 총 16개 물

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중(조특칙 별표13)

- 개정 이후 관세부처(산업부), 업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를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예정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 ☐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 단일세율 적용
 - 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② 사택제공이익의 관련 개정 이유

- ☐ '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사택제공이익을 '과세 제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
 -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 발생*
 - * 단일세율 특례적용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임
 - 그간 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 *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 * 한도(억원) : 업력 10년 이상 300 / 20년 이상 400 / 30년 이상 600
 -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대 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특 례	○ 대상자산 : 가업기업의 주식 ○ 내용 :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과표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사후관리 (5년)	○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이상 가업 경영 ○ 업종변경 제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② 추진 배경

-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
 - OECD 최고수준 세율* 등 감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 증여세 최고세율(%): (일) 55 (한) 50 (프) 45 (미) 40 (독) 30 (영) 20 (OECD평균) 26
 -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 확대
 - *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없음

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이유는?

-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④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 (개정안) 대분류 내 허용
 - 가업상속·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시 업종 변경 가능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① 제도 개요

- ☐ (대손금)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
- ☐ (대손충당금)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 ※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
 -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
 - ⇒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 ❶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 \text{실효세율} = (\text{조정대상조세 합계}) \div (\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❷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text{추가세액} = (\text{최저한세율}(15\%) - \text{실효세율}) \times \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A기업	B1기업	B2기업
❶ 법인세비용	200	50	45
❷ 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50	5	-
❸ 조정대상조세(❶+❷)	250	55	45
❹ 당기순이익	800	450	255
❺ 조정사항(조세비용 등)	200	50	45
❻ 글로벌최저한세소득(❹+❺)	1,000	500	300

-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5%
 (= (55+45)❸ ÷ (500+300)❻),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 × (500+300)❻)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text{ 소득산업비율} = 1 - \frac{\text{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text{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④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 예시

-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 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⑤ 소득산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 ☐ 소득산업보완규칙(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24.1.1. → '25.1.1.)
 - 소득산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시,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
 - 또한, 소득산업보완규칙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가 '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을 예정
 - *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 ※ 다만, 소득산업규칙(IIR)은 현행대로 '24.1.1. 시행
 - 한국이 소득산업규칙(IIR)의 시행을 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함에 따라
 -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소득산업규칙(IIR)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 발생 가능
 - * '24년 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 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시 →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건축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토지·건축물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① 현행 제도 개요**

- ☐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②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조특법 § 38의2)

*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공정거래법 §2)

- ☐ 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 ☐ 직무발명보상금 종류(출원·등록·실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 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배주주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 (개정 취지)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제도 남용* 방지

*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① 현행 제도 개요**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 기술가치금액 = $\text{Max}(\text{a}), \text{b})$

①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②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❶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나,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

❷ 기술가치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세액공제 범위 확대(순자산시가 130% 초과분 → 120% 초과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

II**민생경제 회복****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① 제도개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한도) 상환기간·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1,800만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 (개정취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 (개정내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공제한도) 연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구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현행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개정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 ☐ 근로자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적용기한: '25년말)

구분	내 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
	추가공제 한도		250
		전통시장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② 개정 내용

- ☐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p 한시('23.4.1.~'23.12.31.) 상향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①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 ☐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등으로 달리 적용
 - ❶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 × 100%
 - ❷ 그 외 기부금* : (소득금액 - ❶) × 30%(종교단체 10%)
- * 사회복지단체, 의료법인,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 단체, 종교단체 등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4.12.31.까지 40% 공제율 적용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

구 분	현행	개정안	차이
5천만원 기부	1,350만원*	1,550만원**	+200만원
1억원 기부	2,850만원	3,550만원	+700만원

* (1,000만원 × 15%) + ((5,000만원 - 1,000만원) × 30%)

** (1,000만원 × 15%) + ((3,000만원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3,000만원) × 40%)

- ☐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 장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❶기본한도와 ❷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하여 산정(소득세법 § 35, 법인세법 § 25)

		손금산입 한도 = ① + ②
①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② 수입금액별 (=매출액) 추가 한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3%
	100~500억원	3천만원 + 100억원 초과 금액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500억원 초과 금액 × 0.03%

- ☐ 공연·전시회·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①+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 (인정 범위)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액
 - (사용처 제한)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
- ⇒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하여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

- ☐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 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 이에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하면서
-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환급제도 신설

② 환급제도 개요

- ☐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 환급대행 등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환급 절차 부담 완화 예정(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

(3)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제도 개요

-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용자받은 자, ②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용자받은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④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확대·연장
 - 징수유예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실패로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 (개정내용) 특례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용자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중(4월~)



연계적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① 도입 배경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도 마련

- * 1) 소비자물가('14.1~'23.6.) : 93.7 → 111.1, +18.6%
- 2)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만원): ('14) 3,095 → ('22) 4,249 [+37.3%]
- 3) 주택가격('14.1~'23.6.) : 83.5 → 95.6, +14.5%
- 4) 결혼비용: 신혼집 2.8억원, 혼수 0.2억원 등 3.3억원('23년, ○○결혼정보업체)
- 5) 주택매매/전세가격(억원, '23.6월, 한국부동산원): (전국) 3.8/2.2 (수도권) 5.5/3.0

- ☐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최고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고려해 결정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 (전제)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 없고, 신고세액 공제(3%) 미적용

- ☐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 (현행)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부담
 - (개정) 5천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원 적용되어 증여세 없음

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 ☐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 간소화
-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 불가능
 -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 과도

- ☐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

* 예)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 곤란

예)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상환하는 경우 결혼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곤란

- ☐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①공제한도 설정, ②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 후 2년(총 4년)으로 한정, ③증여재산 범위도 제한*

*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

**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 ☐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 ☐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 4년(결혼 전 2년 이내, 후 2년 이내)으로 설정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① 자녀장려금(CTC) 개요**

- ☐ (도입목적)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14년 도입)
- ☐ (지원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 (산정방식)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CTC 지급액 산정
 - (지급시기) 다음 해 9월 지급
 - (지급실적) 58만 가구, 0.5조원('22년 지급)

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

- ☐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확대
 - (소득요건)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 (최대지급액)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③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 ☐ (수혜가구)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확대(+46만 가구)
- ☐ (지급금액) 현행 0.5조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0.5조원)

(3-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① 개정이유 및 효과**

- ☐ (개정이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행 10만원)가 '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 상향
- ☐ (개정효과) 출산·보육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및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에 따라 세 부담 경감효과에 차이가 있음
 - * (사례)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세 부담 감소 효과 : △18만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원 × 세율(15%))
 - (현행) 월 10만원 × 12월 = 120만원 비과세 → (개정안) 240만원 비과세

(3-2)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① 제도 개요**

-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
 -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지원

(4)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① 제도개요**

-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3%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1회 200만원 한도)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② 개정내용 및 이유

-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 ☐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28일 (금)	7월 31일 (월)	8월 1일 (화)	8월 2일 (수)	8월 3일 (목)
미 달 러 (USD)	1273.40	1280.00	1273.80	1280.70	1293.00
일 본 엔 (JPY)	914.40	908.28	895.18	896.00	902.78
영 국 파 운 드 (GBP)	1629.32	1645.38	1635.18	1637.82	1644.18
캐 나 다 달 러 (CAD)	962.69	966.00	965.70	964.89	968.87
홍 콩 달 러 (HKD)	163.19	164.18	163.34	164.31	165.74
위 안 화 (CNH)	178.33	178.49	178.29	178.63	179.95
유 로 화 (EUR)	1397.94	1411.33	1401.12	1409.67	1415.06
호 주 달 러 (AUD)	854.13	851.97	855.55	846.99	846.01
싱 가 폴 달 러 (SGD)	956.69	961.18	957.92	959.29	963.9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1.60	281.04	282.50	283.43	284.55